



칼럼 김수중 뉴스1 고문

한국이 'G7'에 합류하면

'G7'을 개편 확대하여 'G11'으로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맞장구쳤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반응으로 읽힌다. 트럼프의 G7 개편 구상은 중국에게 예민한 문제여서 한국 외교가 깊어져야 할 집도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 건 구구한 논란을 막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미국시간)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참관하고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위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G7개편 구상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G7은 오늘의 세계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낡은 국가그룹이다. 우리(G7)는 호주, 인도, 한국을 원한다." 그는 오는 9월 유엔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G7정상회의를 가질 뜻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올해 G7 의장국은 미국이다.

트럼프의 G7확대 구상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서방선진7개국로 통칭되던 G7은 경제 의제를 많이 다뤘지만 국제 정치의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된 의견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온 것이 상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아 캐나다 등 기존 7개국 외에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가 추가되면 'G11'이 되고 트럼프-문재인 전화통화에서 논의된 대로 브라질이 들어가면 'G12'가 된다. G11이든 G12든 성사가 되면 세계 경제 및 정치 질서를 주름잡는 국가그룹이 될 것이다.

이 그룹에 중국은 없다. 트럼프가 중국문제를 논의하자고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놓고 세계 언론은 미국의 중국 포위 및 견제전략으로 해석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 섞여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자주의 수호,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 견제실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왕따하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시를 달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딜레마를 안을 수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다. 중국에 철광석 등 자원을 팔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호주도 중국과의 관계에 민감하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한·중 관계만큼 예민하지는 않다.

한국 호주 인도의 참여에 대한 G7 자체의 반응은 확실치 않으나

부정적인 건 아닌 듯하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고, 호주는 서구 문화권에 속한다. 한국은 경제선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국가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로 얻은 높은 신뢰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지만, 이걸 아시아 유일 국가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손상된다는 상실감의 발로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참여를 놓고 G7 내부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 침공을 반성하지 않은 러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트럼프와 푸틴의 밀착을 탐탁잖게 여기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체제가 붕괴된 후 1994년 G7에 편입됐다가 푸틴 정부가 2014년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자 쫓겨났다. G8이 됐다 다시 G7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 러시아는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G7 내의 국가 관계를 트럼프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G11성사여부가 걸려 있다.

G7은 태생부터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와는 다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국가 모임으로 출발했다. 한마디로 경제와 정치코드가 비슷하며 세계은행-IMF 체제에 기초하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

정하는 나라들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영어사용이 불편하지 않은 나라들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GDP 총량은 전 세계 국가 GDP의 46%가 넘는다. 세계화로 G7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이들의 방향설정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여 왔다. G7정상회의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세계적 이슈가 되는 정치문제도 토의하여 의견을 내는데, 그 영향력은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G7의 권위에 의해 국제사회에 미친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질서가 크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이 트럼프구상에 동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로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바로 한국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도전적 국가 과제다. 중국도 G7이 확대되어 G11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반(反)중국 전선을 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것 같다. 중국 외교부의 논평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이다. 과거 미·소 냉전시대를 같이 '철의 장막' 또는 '죽의 장막'을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대결하는 양상이 무작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G11의 멤버가 되는 것은 선진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할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기 극복의 국민정신을 꽃피게 할 수 있는 통합과 예지의 리더십이다.

社 說

우려되는 시·도 의회 의장 선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시·도의회 모두 후반기 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정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광주시의회의 경우 이미 출마선언을 한 김익주 의원(광산구1)을 비롯해 재선인 김용집(남구1) 의원과 김점기(남구2) 의원이 의장에 도전장을 내밀 기세다. 또 전남도의회는 3선인 김한중(장성2) 의원과 재선의 김기태(순천1) 의원, 이철(완도1) 의원이 경쟁에 나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의장 선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경선 절차도 없이 당내 교동정리로 의장을 미리 정한다면 결국 그들만의 나뉘먹기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장의 자질이나 정책 검증은 한낱 공수표에 지

나지 않으며, 결국 시·도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시·도 의회의장의 역할이 단체장 못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모아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형성해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장으로써의 통솔능력과 조정능력, 정책적 비전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의미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시·도민들이 의장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잡음을 우려 조용한 경선과 단독 후보 선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이유는 없다. 불합화음이 있더라도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치열한 경선이 있어야 한다. 의장은 향후 2년동안 시·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자

규금출동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쳐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집안 문이나 서랍장, 창문 등 모서리 부분에 넘어지거나 끼어 다치는 경우는 부모들이 조금은 집안 안전에 소홀하지 않

은지 생각하게 한다. 낮은 위치의 식탁이나 TV 등을 올려놓는 수납장 등에 아이들이 달리거나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찌거나 다치는 경우, 문 밑 모서리에 발가락이 끼어 발가락에 상해를 입는 경우, 심지어 장난을 치다가

앞선 사람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례까지 있다. 이런 사고들은 휴지나 솜 등을 두겹게 문쳐 테이프를 이용해 모서리를 감싸놓는 다든가 시중에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여 조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

이다. 평소 집안이기에 안전사고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 하에 평소 조금 더 준비하고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식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소한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사랑이 아닐까?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